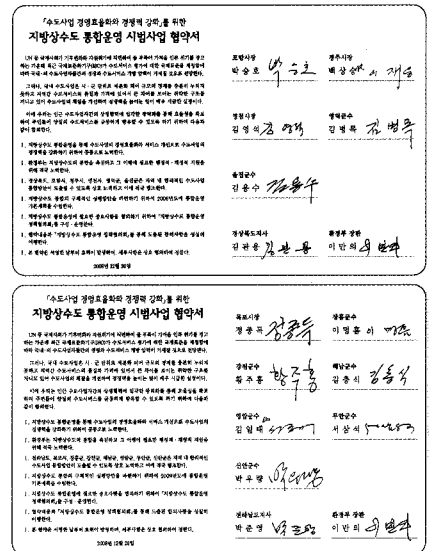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으로 수도사업 강화의 초석 마련

글 정복영 환경부 물산업육성과장



지난 2008년은 우리나라에 수도가 보급되기 시작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였다. 1908년 9월 1일 서울 뚝도 정수장에서 처음으로 급수를 시작하면서 근대 수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수도시설 확충에 재정투자를 실시하여 오늘날 전 국민의 92.1%가 수도물을 공급받는 급수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수도물 공급 비율은 가히 선진국 수준이라 자부할 만하다.

수도사업 경영개선으로 경영부담 완화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수도물의 직접 음용률이 2% 미만으로 국민들의 수도물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고, 최근 발표된 상하수도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특·광역시 등 대도시의 수도 보급율은 거의 100%에 달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수도물 생산원가 및 요금의 지역간 편차가 4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수도사업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미급수 지역에 신속하게 시설을 확충하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싶어도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보니 적기 투자를 통한 수도물 서비스 향상에도 한계가 있다.

한편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의 수직적 분리, 행정단위 중심의 164개 수도사업자의 수평적 분리로 인하여 수도시설의 평균 가동률이 50%에 불과하여 수도시설의 중복·과잉투자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이렇듯 개별 시·군이 수도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한계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에 환경부에서는 수도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상기 사업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164개로 세분된 수도사업을 수계, 급수인구, 경제성 등을 고려해 광역단위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동시에 시설투자와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영효율

화를 피하여 결국에는 수도서비스의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경영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금번 사업을 통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영세하고 비효율적인 수도사업은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되어 개별 지자체 단위를 넘어 운영되게 된다. 이를 통해 인접하는 지역간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시설의 공동사용 및 소규모 시설의 무인·자동화 등으로 물의 생산과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및 서비스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 지역간 격차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수요조사를 하여 총 26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후 사업설명회와 워크숍 등을 거쳐 단체장의 추진의지가 높고, 물이 부족하거나 또는 생산원가가 비싸 시급히 통합관리가 필요한 두 권역인 전남권 9개 시·군(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과 경북권 5개 시·군(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영덕군, 울진군)을 최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수도사업 경영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협약서' 체결 행사를 지난 2008년 12월 26일(전남권)과 12월 30일(경북권)에 각각 개최하였다.

장차 이 두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정책협의회'를 권역별로 구성하여 통합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며 국고 50억 원을 들여 해당 지역에 맞는 최적의 모델이 설계될 것이다. 또한 권역별 최적모델이 제시되면 2010년부터는 국고를 투입하여 노후관망 교체사업 등 본격적인 투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관련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정말 잘 참여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본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면 해당 지역내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땅속으로 새는 수도물을 차단하여 수질 안정성의 확보는 물론, 수도물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예산 낭비를 막아 지방재정을 보다 건실하게 하는 등 맑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환경부는 수도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본 시범사업이 다른 시·도에 모범이 되는 성공 사례가 되도록 발전적인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

